

북한개발소식

2023 DEC

12

통권 218호

이달의 주제

금융으로 본 북한 경제와 주민생활

탈북민 수기

이끄심 - 12화 - 본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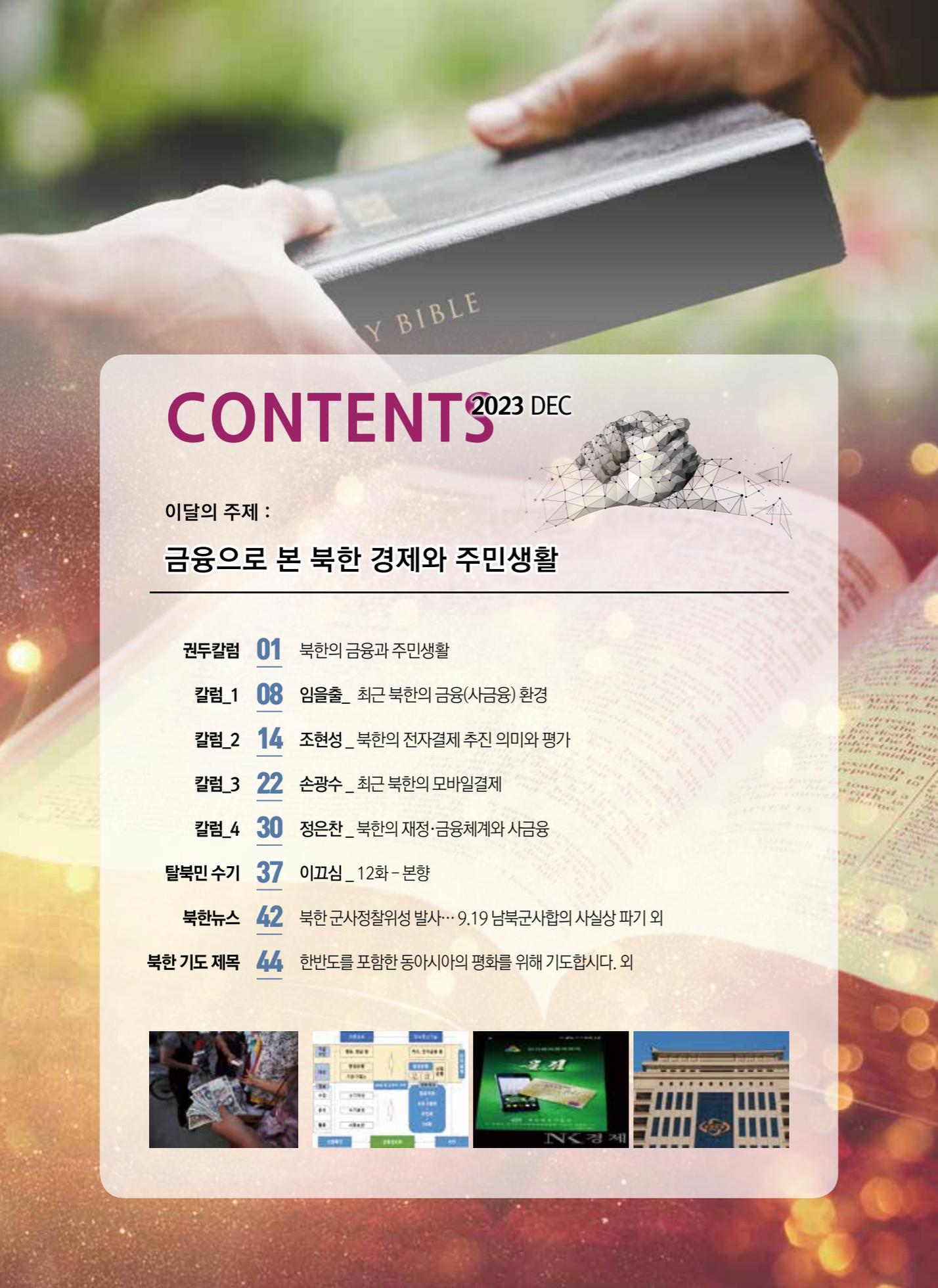
북한뉴스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9.19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CONTENTS 2023 DEC

이달의 주제 :

금융으로 본 북한 경제와 주민생활

- 권두칼럼 **01** 북한의 금융과 주민생활
- 칼럼_1 **08** 임을출_ 최근 북한의 금융(사금융) 환경
- 칼럼_2 **14** 조현성_ 북한의 전자결제 추진 의미와 평가
- 칼럼_3 **22** 손광수_ 최근 북한의 모바일결제
- 칼럼_4 **30** 정은찬_ 북한의 재정·금융체계와 사금융
- 탈북민 수기 **37** 이끄심_ 12화-분향
- 북한뉴스 **42**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9.19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외
- 북한 기도 제목 **44**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



권두칼럼

북한의 금융과 주민생활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금융은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금이나 송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사업이나 주택 구매 등 단시일 내에 비교적 규모가 큰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금융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금융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 국가가 은행을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서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한다. 개인에게는 대출을 하지 않는 등 제공되는 서비스도 제한적이다. 그러다보니 돈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금융이 발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최근 북한은 지역 상업은행이 신설되는 등 금융 제도에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카드 사용이 증가하고 모바일 송금과 결제 서비스가 점점 더 널리 보급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도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민들의

금융 환경이 여러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북한의 최근 금융 정책과 금융 환경의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북한의 경제적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우려점 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북한 금융 시스템과 사금융의 발달

금융은 화폐나 통화의 유통을 가리키는 경제 용어이다.¹ 즉 돈이 오고가는 것, 돈의 흐름을 뜻한다. 우리와는 달리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이다 보니 과거 북한에서는 돈의 중요성이 그리 크지 않았다. 대부분의 물품은 국가에서 배급해주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 소액의 월급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이 돈은 국영상점이나 농민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되었다. 기업들도 국가의 계획과 제공된 자원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공급

1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

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나라 안의 모든 돈은 자연스럽게 은행이나 국가 상점 등을 통해 국가로 회수되었고, 조선중앙은행이라는 단일은행이 모든 돈의 흐름과 관련된 생산 및 거래 활동을 통제하는 “원(북한돈)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북한 경제가 90년대 극심한 침체를 겪고 배급이 중단되고 시장이 대두하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현금 화폐의 기능이 확대되고 그 유통이 활발해진 것이다. 주민들이 끊긴 배급 대신 장마당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확대되었다. 기업들도 시장에서 자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기업의 현금 거래 및 보유가 확대되었다. 시장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돈주’ 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돈의 흐름을 전과 같이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자본을 축적한 돈주가 등장하는 현상은 당국에게 달갑지 않았다. 특히 돈이 국가로 회수되지 않고 개인이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현금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국채 발행 등이 불가능한 경제 상황과 세금이라는 제도가 없다시피 했던 국가 시스템 속에서 은행은 국가 재정과 기업 활동을 위해서라도 회수되지 못한 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북한 돈의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2009년 화폐개혁은 북한 당국이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또한 용납할 수 없는 개인의 사적인 자본축적을 ‘징벌’하는 과격한 대응이었다. 구권과 신권을 100:1의 비율로 교환해주면서 교환할 수 있는 금액을 10만원(후에 50만

원으로 확대)으로 제한한 이 조치로 인해 북한 돈으로 재산을 모아왔던 사람들은 그 재산 대부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결과를 맞아야 했다. 이러한 과격한 정책은 당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달래겠다고 당국은 김정일 하사금을 배부하고 노동자들의 월급을 신권 기준으로 100배로 인상하는 등 돈을 대대적으로 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돈의 가치는 급속도로 떨어져버렸고, 북한 주민들은 수 년 만에 신권 기준으로 백분의 일 수준이어야 할 물건 값이 오히려 구 권 당시 가격보다도 비싸지는 초인플레이션을 맞이하고야 말았다. 화폐개혁의 실패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돈과 은행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내 버렸다. 이제 북한에서 북한 원화는 일정 단위 이하에서 거래용으로만 주로 사용될 뿐, 물건의 금액 단위가 커지거나 가치를 저장해야 할 경우에는 중국 위안화나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일종의 달러라이제이션²이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에서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었고 그에 따라 송금이나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필요는 증가하였으나, 신뢰를 잃은 공공용(은행)은 선택지가 될 수 없었다. 그러자 사금융이 그 대안으로 부상했다. 돈주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송금이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개인은 물론이고 시장을 통해 자원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들까지 자금 조

2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은 달러가 자국 내 통화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했거나 국내 통화와 달러가 병행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연합뉴스)

달쳐 확보라는 측면에서 돈을 찾기 시작했다. 비록 불법적인 활동이기에 상당히 높은 수수료와 이자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민들은 사금융 이용을 통해 부족한 금융적 필요를 채워왔다.

최근 북한의 금융 정책과 금융 인프라 개선

근래에 북한에서는 금융 정책의 변화가 관찰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업은행 제도의 개선이다. 북한은 2006년에 상업은행법을 제정하기는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런데 2015년 북한은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중앙은행의 지역 지부에서 상업업무 관련 부분을 떼어내어 지역 은행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중앙은행의 ‘○○도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점에서 예금과 대출 등의 업무를 ‘○○도은행’이라는 상업은행으로 분리시키고, 그 지역의 저금소³를 상업은행화한 것이다.⁴ 그러면서 ‘카드’ 업무도 상업은행의 업무로 추가하였고, 상당한 이율의 예적금 상품도 판매하기 시작했다. 송금 업무나 카드 사용, 예적금 상품을 통해 개인에게 묶여 있는 돈들을 국가(은행)로 회수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또한 기업들도 현금 돈자리(계좌)가 신설되고 이 계좌에서는 법정가격이 아닌 시장가

3 조선중앙은행 산하 동 단위 조직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예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다.

4 황수민, 양문수 (2020), “김정은 시대 ‘북한식’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제 26권 1호 (2020년 봄호), 174-175.



격과 유사한 협의가격에 의한 거래가 허용되었다. 그리고 돈주와 기업 간의 대차 거래를 은행의 중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회색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활동을 제도 내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⁵

카드 사용의 활성화와 모바일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은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서비스로 꼽힌다. 북한은 2010년 외화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나래 카드, 2015년에는 계좌를 연동한 북한돈(내화)용 전성카드 등이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다. 전성 카드의 경우 주민들의 송금에 주로 쓰인다고 하는데, 기존 사금융에서 제공하는 송금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상당히 외진 지역에도 무리 없이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⁶ 또한 북한은 온라인 상점 결제를 카드와 연동하고 전자 결제와 송금 등을 돕는 “울림”이라는 앱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⁷ 울림 앱

5 위의 글, 176-177.

6 “[경제와 우리 생활] 북한 전자결제카드 권장 이유”, 자유아시아방송 RFA (2022.09.30.),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cbdc81cc640-c6b0b9ac-c0ddd65c/ecolife-09282022151719.html>

7 손광수 (2023), “북한의 금융정보화와 전자결제법 함의”,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2월호, 48-50.

을 이용하면 비교적 낮은 수수료 (약 1~2%)로 송금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북한의 휴대폰 보급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비해 편리한 모바일 송금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이 표방하는 이러한 금융정책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시중의 유틸 자금을 회수하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21년 전자결제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의 1조는 전자결제사업을 통해 “현금류통량을 줄이고 무현금류통량을 늘이며 화폐류통을 원활히 하는데 이바지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⁸ 여기서 무현금화폐는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는 돈이 아닌, 국가기관과 기업소 간의 거래에 사용되고 국가계획에 맞추어 생산과 재료조달을 위해 장부상으로만 처리되는 돈을 의미한다. 계획 이외의 생산과 거래를 위한 현금 사용을 줄이고, 개인의 유틸화폐를 무현금결제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전자결제 확대를 언급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경제 운영 방향은 금융 정책을 넘어 국가 상업망 활성화 등의 움직임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편의점, 백화점 등 국영상점 및 개인이 운영하지만 국가 소유인 상점을 확대 설치한 반면, 국영 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던 미용실이나 이발소 등 각종 상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였다. 양곡의 경우 개인 판매를 제한하고 국가 운영의 양곡판매소로 일원화했다.

코로나19 국경봉쇄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면서 시장에는 유통할 상품이 부족해졌고 민간의 시장 활동은 위축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국가가 운영/통제하는 상점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은 강화되었다. 이렇게 시장 활동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장악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창출되는 이윤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북한의 시장에 대한 통제력 강화 정책은 과거에 시도했던 시장을 반대하거나 없애는 것과는 다른, 국영부문이 시장에 적극 참여해서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움직임인 것으로 평가된다.⁹

여전히 제한된 금융환경과 우려점들

최근 금융 분야에서 보이는 북한의 변화는, 발전하는 전자금융 등에서 나타나듯 주민들이 전보다 더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북한 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화폐개혁과 같은 극단적 조치 대신 시장의 기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에 맞추어 정책을 펼치는 모습은, 통화량 조절을 통한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금융 분야를 비롯한 경제 정책 전반에 자리하고 있는 반개혁적 의도와 민간 부

분의 약화는 우려스럽다. 먼저 현재의 정책이 북한 주민들이 잃어버린 공공용(은행)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만한지 생각해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 시기에 탈북한 탈북민 212명을 대상으로 한 이주영, 문성민(2020)¹⁰의 사금융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은행예금액은 가구당 1달러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탈북민 69명을 대상으로 한 이수룡 외(2019)의 북한의 금융이용실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6%가 은행(저금소)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연 1회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¹¹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가 여전히 예금과 송금에 국한되고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한계점이다. 북한 사회에서 시장이 가지는 의의 중 하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모종의 혁신과 발전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전에 없었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대출이나 대부 서비스는 이러한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 서민들은 좋은 아이디어나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업화할 자금 마련이 어렵다. 대출은 고리대로의 변질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에 주의한다면,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혁신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빈민층을 위해 무담보 소액대출(약 10% 이율로)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인력거나 구두댈이, 소규모 축산업 등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빈곤을 타파할 수 있도록 돕는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적절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빈곤 타파와 주민 생활 개선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북한 경제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공적인 금융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사금융이 그 대안으로 역할을 해왔지만 확실한 대체재라고 말하기엔 한계가 있다. 제도가 미비하다보니 대출자의 신용 확인이나 대출 회수가 어렵고, 그러다보니 돈주들도 지인 외에는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¹² 실제로 앞서 언급한 이주영, 문성민(2020)¹³의 연구에서 응답자 중 약 27.8%만이 사금융을 통해 신용 거래 및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의 종류도 대부분 유통 과정에서 단기로 돈을 빌리는 외상 거래 성격의 장사 밀천이나 지인 간의 금전거래, 농촌에서의 곡물 고리대에 머물렀던 반면 수공업이나 어업 등 산업생산부문에 투자하기 위한 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수룡 외(2019)¹⁴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32.9%만이 돈을 빌려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빌린 목적은 장사(58.3%)나 생계비(37.5%)가 주를 이루었고 사업자금 마련 목적은 4.2%에 불과했다. 돈을

8 위의 글, 50-52.

9 “팬데믹을 전후한 북한경제의 변화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9월호, 11-13.

10 이주영, 문성민 (2020), “북한주민들의 비공식금융 이용에 관한 연구”, 경제발전연구 제 26권 제 4호, 54.

11 이수룡 외 (2019), “북한 금융의 현황 및 주민 이용 실태 분석”, 월간 북한 2019년 5월호, 130-132.

12 이주영, 문성민 (2020), 앞의 글, 54.

13 위의 글, 45-68.

14 이수룡 외 (2019), 앞의 글, 132-133.

빌리는 곳도 70%가 이웃 등 지인, 20%가 친척이라고 답한 반면 돈 놀이를 하는 업자는 4.4% 수준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시장을 통한 혁신이나 기업가정신을 이야기할 만한 금융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과 장기간에 걸친 국경 봉쇄의 여파는 서민들의 사금융 활동을 더욱 위축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돈주들은 크게 권력형과 시장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권력형 돈주들은 당간부나 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부를 창출하는 이데이고 시장형 돈주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권력형 돈주와 결탁하여 활동하는 상인들이다.¹⁵ 또 그 규모에 따라 대형 돈주(주로 권력형) 또는 중소형 돈주(주로 시장형)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봉쇄와 시장 활동 위축으로 시장형 돈주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일각에서는 70%가 넘는 돈주들이 몰락했다는 소식도 들린다.¹⁶ 반면 권력형 돈주들은 당국이 추진하는 여러 대형 건설 사업들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그 세를 넓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의 금융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시장형 돈주가 중심이 되는 시장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농을 대상으로 한 개인 대부 활동이 축소되었을 반면, 주로 대형 돈주들이 참여하는 국가 기관이나 기업을 대

상으로 하는 기업형 대부는 확장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지선(2023)은 사금융이 일반 주민보다는 특권층을 중심으로 비대해졌을 것으로 보고, 향후 경제 수축과 통제 강화의 변화 속에서 특정 권력층에 속하는 관료와 (권력형) 돈주에게 부가 집중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¹⁷

북한 사회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주민 생활이 개선되어야

북한의 금융 정책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이 북한의 경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체제 유지를 위한 핵개발과 통제 강화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도 외부와의 교류 확대와 민간 경제활동 활성화가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루는 방향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은 시장 활동을 공식화하고 기업소나 협동농장 운영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고, 수년간 꾸준한 경제 성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속된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 강화와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자력갱생을 통한 버티기에 돌입했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내세우는 자력갱생과 버티기 기조는 결국 국내의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해야 함을 뜻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강화된 대북제재와 국경봉쇄는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던 주민들의 경제 사정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지만, 국내에 있는 외화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포섭하는 데에는 오히려 좋은 환경이 되었다. 양곡 전매제의 경우 식량난이 심해지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오히려 가중되었지만, 식량 유통을 국가가 통제하고자 하는 당국의 의도는 관철된 것이다. 금융도 기술 발전에 따라 편의성이 증대된 측면은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당국의 통제 강화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계가 있어 보인다.

북한 체제의 이러한 모순은 점점 더 심해지는 불평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얼마간 경험했던 경제적 활기나 기회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일부 돈주들도 몰락하거나 위축되는 형국이다. 그런 가운데 국가 권력과 그에 결탁한 계층은 나라의 제한된 자원을 더욱 독점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주민들에게 희생을 주문하지만, 그 희생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은 축소시키면서 이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외치는 북한 당국의 행보는 모순적이다.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이러한 모순이 사라질 수 있을까? 금융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



를 살펴보면서 들었던 이러한 의문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북한에 핵과 자력갱생이 아닌 진정한 이민주권과 개인의 자유/인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북한이 체제 모순에 빠져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수의 지배연합이 자원을 독식하는 현상이 중단되고, 서민들의 삶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특별히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배제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

15 김윤희 (2015), "북한 사금융의 흐름과 구조 동학에 대한 탐색", 세계지역연구논총 33집 3호, 88-90.

16 [북한 통신] "시장 통제로 북한 돈주 약 70~80% 몰락", 자유아시아방송 RFA (2023.11.01.),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nkcommunication-11012023144126.html>

17 이지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금융 동학과 변화 가능성』, 서울: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67-69.

최근 북한의 금융(사금융) 환경

임을 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부교수)

사금융과 돈주의 성장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킨 동력으로 붉은 자본가로 불리는 돈주(신흥부유층)가 꼽힌다. 이들은 유통시장, 부동산, 금융, 임대 고용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다. 돈주들은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토대로 북한의 사경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이들은 고리대업을 비롯해 전당포 운영, 나아가 아파트 건설 등 각종 이권사업에 투자하며 부를 축적해왔다. 북한 당국은 노동당 당원이 나라의 중심 계층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보통 주민들 사이에선 장마당의 돈주들을 북한을 유지하는 핵심 계층으로 간주했다. 돈주의 역할 증대는 사적 재산의 축적을 불러오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금융(私金融)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시장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축적된 사적 자본이 재투자되어 부를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돈주와 결탁한 북한 권력기관의 비호가 있음은 자명하다. 권력기관의 입장에서 돈주들과 느슨한 관리·공생을 통해 자신들의

뒷주머니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탈북민들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서 사금융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를 유추해보면 대략 1995년 전후였다. 이 무렵 북한의 배급체계가 붕괴 혹은 이완되면서 사경제 부문이 급속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장사를 하거나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금전 거래를 하는 사례가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이후 김정일 시대의 혁신적인 경제개혁 조치로 평가받고 있는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사금융이 더 활성화됐지만, 사금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계기는 2012년의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우리식 경제관리방법’)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¹ 2015년 당시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 국영 공장기업소 지배인과 사장들도 개인 사금융에 의존해 생산활동을 하였다.² 재정적으로 국가 지

1 임을출,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사금융과 돈주』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6) 참조.

2 “北공장도 ‘私금융’ 의존해 가동...50~60% 고리대 기금” 『데일리엔케이』, 2015.9.7.

원이 끊기고 개별 단위들의 자체적인 생산을 독려하는 ‘독립채산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소 사장들이 생산과 투자를 위해 고리대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다. 다소 큰 장사를 하는 돈주뿐 아니라 국영기업소 사장들도 돈이 필요하면 개인 돈장사꾼(고리대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다. 개인들은 친구 소개를 받거나 무역이나 도매업 등 큰 장사한다는 간판(와크·허가서)이 있어야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공장 기업소 사장들은 설비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과거 고리대는 비법(非法)이기 때문에 국영 기업소 간부들은 돈장사꾼에게 대출한 후 이들을 ‘고리대 죄’로 검찰소에 넘겨 돈을 갚지 않는 일도 빈번했다. 하지만 독립채산제가 실시되면서 공장 운영 자금이 필요한 간부들은 돈장사꾼들에게 점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금융에 의존해 장사 및 기업을 운영하는 개인들이 늘어날수록 고리대가 더 기승을 부렸다. 평양시를 비롯한 각 지역마다에 ‘돈집’으로 불리는 개인 금융업자들이 등장해 가만히 앉아서도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이들은 급히 돈 빌리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종전보다 2배나 높은 50~60% 이자율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북한 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는데다가 공장 지배인인 경우 대부를 받으려 해도 수속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은행엔 별로 가지 않는다고 했다. 사금융업자들은 법관(검찰, 보안원)들까지 끼고 그들의 비호 아래 이자율을 마음대로 올리지만, 돈이 급한 개인이나 공장 지배인은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사금융업자들은 북한 돈은 취급하지 않고 달러와 위안화, 엔화 등 외화만을 취급하였다. 돈주들은 검찰소 검사와 보안원들과의 깊은 인맥 가지고 이들의 비호 아래 자유롭게 사채업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 시대가 지나고 2012년 김정은 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자마자 취한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북한 내 사금융의 더욱 큰 진전을 불러왔다. 당시 김정은은 주민들의 장롱 속 달러를 끌어내기 위해 “돈의 출처를 따지지 말고 투자하게 하고, 이윤도 보장해 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사금융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 등이 늘어나면서 더욱 성장하였다. 돈주와 사금융은 체제 전환이나 경제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현상이다. 북한의 사금융 실태는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소비 분야에서 시작해 점차 생산과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금융의 발생 원인이나, 시장의 확산 과정에서 자본이 투자되면서 확대 재생산

되는 과정은 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공통적 현상이다. 시장의 확산으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공간과 기술, 기회가 점차 증가함으로써 자본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 또한 점차 다양해지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도입했던 금융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커지는 북한 당국의 고민과 내부 자본조달 메커니즘 구축

그러나 사금융과 돈주가 주도하는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 당국의 고민도 덩달아 커져갔다. 돈주나 사금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북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비사회주의적 현상이 만연해지자 딜레마에 직면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고강도 제재는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사금융 시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더욱 키웠다. 국제 사회의 제재 강화로 외화 유입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북한 내부의 사금융 시장이 외화를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은 커졌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금융의 역할이다. 북한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이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북한은 체제전환은 아닐지라도 사적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금융 개혁의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고, 사금융을 공식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안정적인 신용제

도를 도입 정착시켜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게 됐다. 당국 통제 밖의 금융 활동은 적절히 관리하면서도 내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자력갱생에 의존하는 북한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재원조달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투자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상업금융 시스템의 미발달로 성장 가능한 업종 및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막혀 있다. 그래서 북한 당국도 나름대로 금융활성화를 도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2015년 12월에는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를 열어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경제건설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북한 기업들은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로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북한 당국과 기업 모두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과 기업들은 국제사회의 엄혹한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 국제금융보다 국내금융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정상화하고, 이를 위해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유휴화폐자금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조달 및 운용) 정상화가 경제건설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³

높은 수준의 국제제재를 받고 있는 악조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일찌감치 국내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다. 특히 경제부흥을 위한 자금수요는 국내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2006년 상업은행법을 만들었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보급에 의한 자금 순환, 인민생활영역에서의 카드 및 전자화폐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주민유휴화폐의 이용에 관한 시행세칙 등을 통하여 국영 기업이 주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대출에 가깝고, 상업금융에 대한 공식적인 제도는 구축되어 있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최근까지도 북한의 지방은행, 예를 들면 강원도 은행지점들이 주민들의 유휴 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저축 상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⁴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자율도 비교적 높지만 은행에 대한 주민 신뢰도가 워낙 낮아 대부분 주민이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강원도은행은 원산 지점을 비롯한 도(道)내 지점들에 ‘4분기 적금 이자율을 올리고 인민들이 저금한 돈을 원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게 지점들이 철저히 담보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시문을 내려보냈고, 이에 강원도 내 은행지점들에서는 새로운 장·단기 저축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이자율은 4~9%로 지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상품 계약서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시돼 있다. 결국 이 지시는 은행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여 주민들의 유휴 자금을 끌어냄으로써 지방은행의 자금을 확대하고 운용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개혁

사실 일찌감치 북한 당국이 금융개혁 추진 등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민간 보유 현금의 환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시 말하면, 북한 당국은 강제적인 ‘화폐교환조치’보다 북한주민들의 자발적인 은행 예금 유치를 위한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상업금융기관의 설립 등 금융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

3 임을출,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계승과 변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6), pp.331-332.

4 “北 지방은행, 주민 유휴자금 끌어내려 새 저축 상품 내놔,” 『데일리엔케이』, 2023.10.26.

었다. 금융개혁은 체제전환국들이 계획경제 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경제개혁을 추진할 때 실시하는 최초의 개혁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금융개혁에 나설 경우 이는 경제개혁의 첫 신호탄으로 간주되었고, 실제 북한은 김정은 집권(2012년) 이후, 다양한 경제개혁 추진과 함께 금융부문에서도 많은 변화가 관찰되어 왔다.⁵ 먼저 은행체계와 관련해 2015년 중앙은행법(2004년 제정)과 상업은행법(2006년 제정)이 모두 개정되었다. 2016년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투자안내』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상업은행은 조선중앙은행에서 조직 및 기능을 분리해 설립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 북한에서 발간된 『발권 및 통화 조절 방법론』이라는 책에서는 북한의 은행체계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으로 조직적, 기능적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도 달라졌다. 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은행계좌 개설, 주민들은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서 화폐유통, 지급결제 수단도 변화했다. 기업은 ‘현금 돈자리’가 신설되어 현금결제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저축계좌를 보유하게 되었다. 현금 돈자리를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국정가격이 아닌 시장가격과 유사한 협의가격에 의한 거래가 허용되어, 가격자유화가 일정부분 수용되고 있기도 하다. 주민은 ‘카드사용’이 장려되면서 결제계좌를 보유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나래카드

는 카드 발급시 신상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되며, 전성카드는 은행망을 기반으로 결제 및 계좌이체가 가능한 직불카드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밖에 유선전화 사용시 카드결제를 통한 납부가 장려되고 있고, ATM 기계가 설치되어 송금이 가능하다. ‘주민-기업소 자금대차’ 제도로 종전의 사금융을 제도상으로 허용하며 상업은행은 주민과 기업소 간의 중개역할을 담당하여 그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국의 금융감독기능 강화와 사금융·돈주의 위축

최근 주목할 대목은 북한 당국이 법제도와 질서를 강조하면서 직접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서 설명한 대로 김정은 정권 들어서 경제적으로 전향적인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으나, 코로나19 봉쇄 등을 거치면서 경제 정책 방향도 보수화되고 시장 활동이 위축되면서 그에 따라 사금융도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통제로 북한 돈주의 약 70~80% 몰락했다는 보도도 나온다.⁶ 북한 주요 도시에서 최근 들어 달러와 위안화를 교환하는 환전상들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⁷ 그 이유는 중앙은행 각도, 시(군) 지점에서 시장환율로 외환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환전상들이 다른 일거리를 찾아 거리를 떠났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 물론 외환거래 공개를 꺼리는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환전상을 찾고 있다. 중앙은행 시 지점에서 달러나 위안화를 갖고 가면 시장 환율로 교환해 주지만, 북한 원화로 달러로 환전하기는 어렵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북한에서 외화 환율은 정부가 정한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90년대부터 도시 주요 지점에 공식환율과 시장환율 차익을 실현해 돈주가 된 환전상들이 적지 않았다. 어쨌든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외화와 현금의 흐름을 통제하면서 당국 주도의 금융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흐름은 법제도를 통해서도 읽혀진다. 2023년 10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 전원회의에서 금융감독법이 새로 채택됐다. 금융감독법은 금융감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금융활동을 원활히 보장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데서 나서는 법적 요구들을 규제하고 있다. 기존 법규(중앙은행법, 전자결제법)가 개정되고 새로운 법(금융감독법)이 나왔으며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 부총리 주도로 금융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여기에 금융 부문 최고 수장, 즉 조선중앙은행 총재도 교체됐다. 금융 개편의 방향성은 금융 관련 질서를 세우고 법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거래의 신속성과 정확성, 투명성과

편리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보화 정책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지금도 북한은 은행 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해 북한 인트라넷과 북한 스마트폰에서 은행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5 김민정, “최근 북한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 한국은행 금융강좌 제871회(2021.12.10) 등 참조

6 [북한 통신] “시장 통제로 북한 돈주 약 70-80% 몰락” RFA, 2023.11.1.

7 서울평양뉴스, 2023.11.13.

북한의 전자결제 추진 의미와 평가

조 현 성 (IBK경제연구소 차장)

금융(金融)은 금전의 유통이라는 말로 ‘돈의 흐름’을 뜻한다. 금융이라는 의미를 되새겨보면 사람들의 일상은 금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수입),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고(지출), 여윌돈을 은행에 예치하고(저축), 집을 사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는 은행을 통해 돈을 빌리기도(대출) 한다. 친구에게 축의금을 보내거나 주식을 사는 것도 금융생활 중 일부이다. 말 그대로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이 금융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어떨까?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금융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북한 주민들은 직장에서 생활비(월급)를 받고 국가에서 정해진 국정가격으로 식량을 배급받고 상품을 공급받았다. 상점에서 살 수 없는 상품은 ‘장마당’에서 구입하기도 했지만 90년대 중반까지는 많지 않았다. ‘돈’이라는 화폐를 통해 경제 활동을 했지만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거의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직장에 배치되어 일하고 생활비를 받았으며 국가가 정해주는 국정가격으로 국가상점에서 식량과 소비품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돈’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국가에서 배급 해주거나 공급해주던 식량이나 상품은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국정가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비싸졌다.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생활비로는 쌀 1kg도 살 수 없게 되었다. 금융생활의 급격한 변화는 북한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 불법으로 여겨졌던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외화벌이사업소가 곳곳에 생기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돈벌이에 나섰다.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나뉘어지게 되었고 주민들은 더 잘살기 위해 혹은 생존을 위해 더욱 더 돈벌이에 집착하게 되었다.

그러던 2009년 11월, 북한 당국은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실시한다. 높은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과 부족한 정부재정의 확충, 시장과 시장경제 활동의 억제가 주 목적이었다.¹ 화폐개혁에 따라 주민들은 정부가 정해 준 한도내에서 새 돈을 바꿀 수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휴지조각이 되었다.

1 양문수, “북한의 화폐개혁: 실태와 평가,” 『통일문제연구』 제22권 1호 (2010), 7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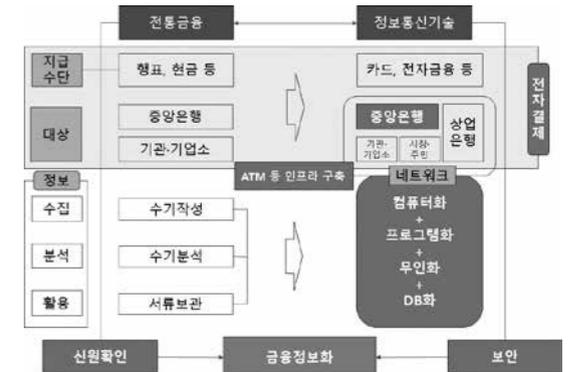
어렵게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는 것에 북한 주민들은 분노했고 이는 북한 당국마저 당황케 하였다. 결국 화폐개혁을 주도했던 재정상의 경질²로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그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북한은 물가상승의 억제, 시장화의 확산 방지, 시중자금의 흡수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주민들의 신뢰만 잃었다. 반면, 주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 당국을 더더욱 믿지 않게 되었다. 달러나 위안화와 같은 외화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고 화폐개혁 초기 시장 충격으로 인해 잡힐 것 같았던 인플레이션은 다시 크게 요동쳤다. 이러한 혼란이 수습되기 전에 아버지 김정일이 죽고 새로운 지도자로 김정은이 등장하게 되었다. 젊은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달랐을까?

김정은 정권의 개혁정책과 금융정보화

김정은의 등장과 정책을 얘기하기에 앞서 전자결제가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전자결제를 “은행과 은행사이, 은행과 기업들사이, 은행과 개인들사이의 채권, 채무를 컴퓨터망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청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무현금결제”로 정의³하고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컴퓨터 등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서류나 현금이 아닌 전자적방법으로의 ‘돈’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결제를 위해

2 일부에서는 총살했다는 소문도 있다.
3 리광남, “상식: 전자결제,” 『경제연구』 주제109(2020)년 4.

〈그림 1〉 북한의 금융정보화와 전자결제의 관계



(자료: 조현성, “김정은시대 북한 금융정보화 정책 연구: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24권3호, 2023)

서는 카드 등 전자적 결제수단과 이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다. 북한은 2015년 전국 재정일군대회에서 전자결제를 비롯한 금융정보화를 북한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여기서 금융정보화는 전통적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전자적 결제수단을 도입하고 이의 대상을 확대한 전자결제를 중심으로 돈의 꼬리표를 붙이는 신원확인(실명확인),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는 보안, ATM기와 같은 인프라확산, 컴퓨터를 통한 금융정보의 수집과 분석, 활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전자결제를 추진하는 것일까? 우선 김정은 정권 취임 전후로 돌아가 보자. 김정은이 취임한 2011년은 화폐개혁의 후폭풍이 아직 가시지 않은 때였다. 화폐개혁 초기 갑작스런 충격으로 일정부분 잡히는 것처럼 보이던 물가는 다시 폭등했고 신뢰를 상실한 북한 원화를 대신하여 달러화와 위안화 등 외화수요가 폭증하면서 달러당 3000원이던 달러원 환율은 8000원까지 치솟게 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달러를 비롯한 외화로 가격이 책정되고 이는 다시 물가를 자극하였다. 북한 통화의 신뢰상실이 외화 수요를 자극하고 상인들의 외화선호가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다.

공금융의 무력화와 사금융의 창궐도 문제였다. 북한의 금융은 여느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은행제도로 운영되었다. 물가안정과 통화가치 안정을 주요 업무로 하는 자본주의적 은행제도와는 달리 북한의 중앙은행은 은행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예산수입과 지출을 집행하는 재정기관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 여기에 주민들의 저축을 통해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저축 기능과 기관·기업소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대부 기능을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은행제도는 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와해되었다. 자금조달 원천이던 예산수입과 주민저축이 줄면서 저축한 돈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주민들은 자신들이 저축한 돈이라도 찾아쓰려고 했으나 은행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거나 뇌물을 줘야 일부라도 돌려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금융이 등장하였다. 초기 재일교포나 외화벌이 회사(무역회사), 장사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시중의 자금공급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일종의 고리대금업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도권 금융이 붕괴된 북한에서는 어쩌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이는 또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돈을 빌려간 일부 사람들이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회수하려는 사람들과의 폭력사태와 함께 집과 가

재도구를 빼앗기는 사례까지 생겨났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내부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달러라이제이션(외화선호) 등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시중 물가의 상승은 화폐의 무분별한 발행에 따른 유동성 과잉과 시중에 풀린 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회수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의 이러한 분석은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⁴

북한 당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개혁정책)을 내놓았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개혁정책은 대외적으로는 무역활성화와 경제개발 구 등을 통해 외화 수입을 확대하고, 대내적으로는 시장요소를 일정 부분 수용한 생산과 유통부문에서의 상품공급 확대 및 금융부문 개혁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중 생산·유통부문에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였는데 그 핵심은 기관·기업소의 자율성 확대이다. 계획지표의 선택과 은행대출 및 주민유희자금의 활용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자금공급을 줄임으로써 화폐공급 측면에서 공급의 축소를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정책과 함께 기업소 현금돈자리와 외화돈자리 개설을 허용해 주고 은행을 통한 거래를 강제함으로써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기업소 보유 현금과 외화를 회수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

4 문성민(2005)은 북한의 인플레이션은 현금화폐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였고 이영훈(2012) 등도 북한의 장기 인플레이션 원인이 통화증발에 따른 화폐적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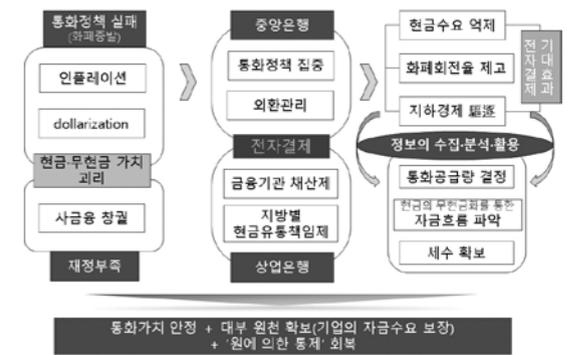
다. 금융부문에서는 상업은행을 분리하고 ‘지방별 현금유통책임제’를 도입하였다. 중앙은행의 도총지점을 지역 상업은행으로 바꾸고 각 은행별로 ‘금융기관채산제’를 도입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자금은 지역 자체적으로 조달하게 하였다.

다시 전자결제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과 함께 전자결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개발도상국들은 저축과 대출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축할 ‘돈’이 많지 않고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인 용이라는 측면에서 개인대출은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는게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랬고 중국이나 베트남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개발도상국에서 시중의 자금을 은행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급결제자금의 은행 유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급결제는 기업소간, 개인과 기업소간, 개인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이러한 자금이 은행을 통해 유통되어야만 자금의 회수기능을 일정 부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현금으로만 결제된다고 하면 은행을 통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전자결제이다. 전자결제는 카드나 계좌를 통하기 때문에 은행을 거쳐야 하고 이러한 자금의 은행 유입은 현금회수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결제의 추진 목적

북한 당국은 전자결제를 포함한 금융정보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목적은 <그림2>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 전자결제 추진 목적



자료: 필자 작성

우선 북한 당국의 통화정책 실패와 재정의 부족은 인플레이션과 달러라이제이션, 그리고 사금융의 창궐을 가져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북한은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도입했는데 은행부문의 개혁정책을 보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였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과 외환관리를 통해 화폐가치의 안정과 물가안정에 집중하게 하는 한편, 지역 상업은행은 금융기관 채산제와 함께 지방별 현금유통책임제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력갱생’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를 연결하는 것이 전자결제이다.

전자결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현금수요의 억제이다. 카드나 계좌이체 등을 통하면 현금의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현금수요 감소는 국가에 의한 화폐공급을 줄일 수 있게 해주고 이는 시중 통화량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화폐회전율도 빨라질 수 있다. 보통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이동은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서류나 현금을 통한 결제보다 훨씬 간편하다. 시중에 똑같은 현금이 있다고 할 때 그 속도가 빨라지면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

문에 적은 현금공급만으로도 기존과 동일한 유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 지하경제를 구축하는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은행을 통한 자금거래는 모든 거래가 컴퓨터에 기록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자금 이동에 대한 파악이 쉽고 이는 음성적인 경제, 즉 지하경제를 축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북한 당국은 간접적인 효과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결제는 은행을 통한 모든 거래가 컴퓨터에 기록되고 관리된다. 방대한 거래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시중에 공급할 통화량을 결정할 수도 있고 자금흐름을 파악하게 됨으로써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지는 효과도 있다. 당국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세원의 추가적인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는 세수증가로 이어져 북한 당국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자결제 추진경과와 평가

북한 카드의 시초는 2005년부터 발급된 ‘실리’ 카드였다. 하지만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2010년 출시된 조선무역은행의 ‘나래’카드부터이다. 익명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약간의 수수료와 함께 외화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나래’카드는 북한의 고질적인 외화 ‘잔돈’문제를 해결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2015년에는 조선중앙은행의 원화전용카드인 ‘전성’카드가 출시되었다. 전성카드는 백화점이나 일반 국영상점, 음식점 등 카드결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며 손전화 요금을 충전하거나 전자상거래에도 이용 가능하다. 나래카드와 전성카드를 포함하여 현재 북한에

는 20여종의 카드가 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⁵

북한은 카드를 탑재하여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는 ‘울림’이라는 전자지급결제시스템도 도입하였다. ‘울림’은 평양정보기술국에서 제작한 모바일결제시스템으로 조선중앙은행의 ‘전성’카드를 탑재할 수 있으며 전화요금 충전이나 가입요금 지불, 카드송금, 잔고조회, 전자상점 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2020년에는 이를 업그레이드한 ‘울림 2.0’이 출시되었다. ‘울림2.0’은 ‘전성’카드 뿐 아니라 다양한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전화, 집전화, 전기료 등의 지불도 할 수 있는 등 그 기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등 전자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춰지고 있다. 평양 뿐 아니라 도시급 백화점이나 국영상점들은 카드결제 단말기를 갖추고 있으며 각 지역 상업은행과 저금소에는 ATM 등의 기자재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15년 ‘옥류’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연풍상업정보기술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물상’이 도입되었다. 이외에도 ‘은파산’, ‘실리’ 등의 전자상점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점들은 의류 및 전자제품, 식료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카드를 이용한 결제와 배송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북한의 전자결제 추진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속도전’을 강조하던 기존 정책 추진 방식과는 달리 전자결제는 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0년 ‘나

5 노정민, “북한에서 사용·개발 중인 전자카드 20여 종,” 『rfa』, 2018.3.8.

〈표 1〉 북한의 주요 카드 현황

카드명	발급은행	출시년도	충전통화	이용대상	가맹점	방식
나래	조선무역은행	2010	달러·유로화 등	내·외국인	모든상점	선불
고려	고려은행	2011	외화	내국인	외화상점	직불
전성	조선중앙은행	2015	원화	내국인	내화상점	선불·직불
선봉	황금의 삼각주은행	2015	위안화	내·외국인	라선특구	선불
금길	조선대성은행	2016	외화	내·외국인	외화상점	선불

자료 : 정주봉(2018)

래’ 카드를 시작으로 2015년 ‘전성’ 카드를 출시하였으나 이를 지방 주민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이다.⁶ 평양 등 일부 지역 또는 일부 기관에서 먼저 운영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전자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낙후된 인프라의 수준과 함께 이를 빠른 시간에 개선할만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이다.⁷ 두 번째는 기관·기업소, 주민 등 경제주체의 반발로 인한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당시 경제주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북한의 정책결정자나 입안자로 하여금 시장에 대한 정책 경험을 축적하게 하였고 경제 및 금융환경이 외부적 요인(시장)으로 인해 실패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⁸ 즉, 화폐개혁의 경험은 시장에 대한 통제방법의 변화를 고민하게 만들

었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하였으며 그 방법은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실패 시 이를 보완하거나 개입이 가능한 방안까지도 포함하게 하였다. 세 번째는 투자 대비 효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출시된 외화전용카드인 ‘나래’ 카드는 2012년 기준 12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면면을 보면 백화점이나 고급 봉사·편의시설 등 투자대비 효과(외화 흡수)가 확실한 곳 위주로 결제기 등의 투자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성카드 등 카드결제 시스템의 확산도 투자 대비 효과(경제성)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도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제와 유인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은이(2022)는 2012년 휴대전화 보급과 함께 사금융의 일종으로 시작된 ‘전화돈’이 주민의 유희화폐자금 회수에 효율적이며 상품 및 서비스의 결제수단으로써 편리성과 유동성이 보장되고 예금효과를 가져오는 등 당국의 재정·금융정책에 효과적으므로 공식부문으로 흡수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⁹ 하지만 북한은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6 문성휘, “북, 주민들에 현금카드 발급 의무화,” 『rfa』, 2017.7.18
7 북한은 금융관리체계 완비의 어려움으로 투자비용과 인적자원의 부족,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를 꼽고 있다. 문성혁, “금융관리정보체계의 유리성에 대하여,” 89
8 정재호, “경제난 이후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22), 41.

9 정은이, “소액금융의 시각에서 본 북한 손전화 ‘전화돈’의 재발견,” 『통일문제연구』, 2022 상반기 제34권 1호(통권 제77호), 192-193.

〈표 2〉 북한의 전화돈과 ‘올림’의 기능 비교

	전화돈	모바일결제시스템 ‘올림’
지급결제 원천	충전된 전화요금	전성카드 등
사용처	소액결제 및 송금, 소액대출 등	결제 및 송금, 국가납부금 납부
편리성	모든 휴대전화에서 사용 가능	- ‘올림’이 탑재된 고급 스마트폰에 한정 - 전성카드는 카드결제 가능한 곳만 사용
특징	〈사금융〉 - 현금교환 가능 - 선물 등으로 사용 가능 - 송금 시 한도 제한(150원) - (수수료) 일정하지 않고 지역마다 편차	〈공식금융〉 - 현금교환 불가능(전성카드는 출금가능 가능) - 선물 등으로 사용 가능 - 송금 시 한도 제한 없음 - (수수료) 지역차이 없고 저렴

자료 : 정은이(2022)와 신문기사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취한 것¹⁰으로 알려졌는데 전성카드와 모바일결제시스템 ‘올림’이 ‘전화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기관·기업소의 전자결제는 아직까지 정확한 추진 행태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은 전자결제법, 영수증법 등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북한은 2021년 제정한 전자결제법에서 “현금류통량을 줄이고 무현금류통량을 늘이며 화폐류통을 원활히”하기 위한 법임을 명확히 했다. 은행 간 결제 체계 구축은 중앙은행, 은행과 기관·기업소 간 결제체계의 구축은 상업은행으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 및 자료보관, 사고 및 감독통제, 처벌 등의 조항도 삽입하였다. 같은 날 제정한 ‘영수증법’에서는 “물자와 자금의 류동정형을 통일적으로 장악함으로써 국가재정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목적으로 해당 법을 제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법에서는 영수증 발급단위를 “경제적거래관계에서 자금을 받은 단위”로 폭

넓게 정의함으로써 현금거래의 제약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즉,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기관·기업소의 현금거래를 공식부문으로 귀속시키고 이를 통해 현금과 무현금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전자결제로의 유인정책이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전자결제 추진은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주영(2022)에 따르면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북한 주민들의 전자결제카드 사용 경험은 2014년 이전과 그 이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화카드에 대한 사용경험은 2014년까지는 5.4%에 불과했으나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탈북한 탈북자는 14% 정도로 10% 가까이 증가했다. 내화카드 사용경험도 6.8%로 괄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점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에서 진행한 탈북자 심층 인터뷰에서도 나타난다.¹¹ 정은이(2022)도 ‘전성’ 카드 이용자가 증가하고

10 북한은 2020년 7월 전화돈 송금의 횟수와 상한액을 제한하고 매매와 현금화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최지영,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4월호, 44.

11 탈북자 A(평양거주, 2019년 탈북)는 조선중앙은행 지점 앞에 길게 줄 서있는 사람들이 있어 물어보니 전성카드를 통해 송금하려는 사람들이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탈북자 B(남포 거주, 2019년 탈북)는 나래카드를 활용하여 휴대전화 통화료 장사를 하었다고 응답.

있다고 추정하면서 이의 원인으로 저렴한 수수료와 낮은 진입장벽, 공공용의 신뢰 회복, 기존 저급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등을 꼽았다.¹²

다만, 북한의 전자결제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상업은행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했다고는 하지만 북한 내 경제 주체들이 이를 북한 당국과 별개의 조직으로 볼지는 의문이다. 당국과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은 북한에서 자금의 출처와 이동상황, 현금잔고까지 국가가 파악하도록 경제주체들을 강제하거나 유인하기는 쉽지 않다. 설사 일부 자금(주민의 생활비나 기관·기업소의 일부 자금 등)은 정책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거래의 상당 부분은 더 음지로 숨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자결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결론

전통적인 북한경제는 ‘돈’이 중요하지 않은 현물경제¹³에 가까웠다. 국가에 의한 배급과 공급은 북한 주민의 자립의지를 약화시키고 국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90년대 경제 위기는 국가-주민 간 의존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돈’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었고 당국의 통제에도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12 정은이, “‘전성카드’가 북한 소액금융 및 송금시스템에 미친 영향 분석: 카드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Vol. 27 No. 2(2022), 115-119.

13 김병연(2014, p.4)은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에서 배급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에서의 배급제는 화폐사용의 제한을 가하는 제도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영훈(2006, 2015)도 생필품 배급제는 현금의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경제가 현물경제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폐의 증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에 대한 주민의 신뢰 급감은 화폐순환구조의 파괴를 가져왔고 이는 인플레이션과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의 창궐로 이어졌다. 북한 당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물경제부문의 개혁과 함께 금융부문 개혁도 추진 중인데 전자결제도 그 한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전자결제는 현금수요를 줄이고 화폐유통속도를 향상시키며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지하경제를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이 겪고있는 여러 통화·금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전자결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통화량 조절이나 현금흐름의 감시를 통한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기존과는 달리 주민의 저항을 최소화한 소프트한 ‘통제와 관리’라는 측면에서 북한당국은 장기적인 계획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단계별 접근 방식으로 전자결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전자결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기관·기업소, 주민을 포함한 경제주체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자금의 출처와 이동상황, 그리고 보유자산을 당국에 의해 ‘통제’당하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당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당해 온 북한의 경제주체들이 편리성과 신속성을 홍보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에 순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북한의 모바일결제

손 광 수 (KB경영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코로나19라는 현대사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이후 비록 엔데믹에 접어들었음에도 코로나19 이전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생활에 많은 변화를 느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지급결제시스템의 변화이다. ‘초연결’, ‘초융합’이라 특징되는 4차산업혁명은 금융과 ICT기술이 연계되어 전자상거래와 지급결제가 PC-인터넷결제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결제하는 이른바 ‘모바일결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감염병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비대면 일상’은 이러한 모바일결제를 우리 사회에 매우 빠르게 정착시켰다.

지급결제란 무엇인가?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지

급결제라고 한다.¹ 지급결제에는 지급→청산→결제 3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급은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들이 서로 주고받을 채권·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음,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은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결제는 청산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정간에 자금이체 등을 통해 서로 주고받아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이다.² 지급결제에서 ‘지급수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지급수단에는 현금과 어음, 수표, 신용카드 등 다양한 형태의 현금 외 지급수단들이 있다. 지급결제제도나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주체들이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

1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개요, <http://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45>, 검색일: 2023년 5월 15일

2 앞의 글

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법적 제도나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북한에도 이러한 지급결제시스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현금’을 가장 중요한 지급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에도 이동통신산업이 발전하면서 손전화(휴대전화) 보급이 늘어나고, 이를 활용한 지급수단의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북한당국이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코로나19와 비대면 결제

한국을 먼저 살펴보자. 한국의 경우 ‘모바일결제’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점으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본다. 그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사실 공인 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야 했기 때문에 PC에서 전자상점(예, 1X번가, 쿠팡 같은 온라인 스텝 등)에 로그인하여 에스프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선호되었고 휴대전화를 통해 결제하려면 소액결제로 요금제에 가입되는 방식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요금이 늘어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 일부 소비자들은 모바일 결제에 부담을 가졌었다. 기존의 대면 결제에서 PC를 통한 온라인 결제 역시 혁신적이었지만 PC나 노트북이 있는 집이나

3 김성숙, “전자상거래 에스프로 제도의 입법화과정에서 소비자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스연구』 제6권 3호(고양: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5.12), p.349; 에스프로란 매매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신뢰있고, 중립적인 제3자(Escrow Agent)가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매매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판매자에게 대금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무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간과 인프라의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비대면 결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가급적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재화를 구매하고 돈은 결제해야 했다. 지역상품권을 휴대전화 앱을 통해 구매하고 QR코드를 인식해 결제하는 ‘제로페이’나 결제 앱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은행계좌를 연동해 QR코드나 바코드를 인식해 결제하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방식의 비대면 결제가 늘어났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는 PC나 노트북이 소지했던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해주었으며, QR코드 역시 카드 결제 리더기가 반드시 있어야 했던 기존의 인프라의 제약을 벗어나게 해주었다. 비대면 결제는 진정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결제의 환경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해방시켜주었다.

엔데믹에 접어든 최근, 다시 해외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행객들은 이전과 다른 변화를 느끼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은행에서 달러나 유로를 환전하여 직접 들고 방문지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필요한 통화로 환전을 해야 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해도 카드복제의 위험이 있거니와 위험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카드 수수료가 높아 부담이 컸다. 요즘에는 외화를 환전해 직접 가지고 가기 보다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혹은 외화결제에 특화가 되어 있는 체크카드가 해당국가의 QR코드페이와 연동되어 바로 결제되는 세상이 되었다. 환전소를 가야 하거나 신용카드가 복제당할 위

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비대면 결제 인프라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편의성과 경제성이 증대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 같은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외화현금을 소지하다가 잃어버릴 위험을 줄이고, 휴대전화와 QR코드 결제수단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쉽게 결제한다. 지급결제회사들은 보다 많은 고객들을 유치해 자사 환전서비스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결제방식에는 반드시 인터넷 데이터가 연결되는 휴대전화가 필수이다.

이러한 모바일 결제는 미국과 서방에서도 시도했었지만 중국의 휴대전화를 활용한 QR코드 방식 결제가 확산되면서 정착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가 추진되었지만 2015년이 넘어서면서 중국 전국에 확산된다. 그 이전의 중국은 서방세계와 달리 신용카드 등 금융결제 인프라가 미비하였다. 금융제도가 개혁되기 시작했고, 외국인투자가 활발해졌음에도 외국인들의 중국 내 신용카드 결제는 매우 어려웠다. 마윈이 추진한 알리페이를 비롯해 위챗페이 등 휴대전화를 활용한 QR코드결제는 개인과 개인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중국인민들에게 금융혁신으로 인식된다. 특히, 위챗페이는 '위챗(Wechat, 微信)'이라는 메신저와 연동되면서 지인 간에 돈을 송금하고 메신저로 즉시 송금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명절이나 경조사에 '홍바오(紅)'라는 용돈을 주고받는 중국의 관습과 결합해 모바일 결제방식으로 빠르게 인식되었다.

북한도 중국의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 12월 《재정은행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라는 제목의 서한으로 '제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에 참석한 재정은행 관계자에게 발표한 연설문을 발표한다. '금융정보화'를 강조하는 것인데 ATM기를 비롯해서 은행업무의 전자화를 비롯하여 사실상의 금융현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3. 북한의 모바일 결제와 전화돈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 12월이 돼서야 금융정보화를 강조하지만 사실 북한 주민들은 모바일 결제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전화돈'이라는 이름의 결제수단이다.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 크레딧머니(가상공간에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와 같은 개념인데 처음에는 이 '전화돈'이 북한당국이 쓰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었다. 북한주민들이 2009년 12월 화폐개혁으로 북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 휴대전화 요금제까지 팔아서 돈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전화돈'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다. 3세대 이동통신사업(3G)이 도입된 2010년경 북한의 통신사는 고려링크 하나뿐이었는데 휴대전화를 가입하면 요금제를 한 달이 아닌 한 분기(즉 3개월)에 한 번씩 기본요금을 내고 한 달에 200분씩 음성통화시간을 제공받는다. 한 분기에 2,850북한원을 내면 한 달에 200분씩 3개월이면 총 600분의 음성통화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휴대전화 가입 초기인 2010년대에는 가입자가 많지 않아 일반주민의 경우 음성통화를 사용할 일이 많이 없으니 한 달에 200분을 제공받아도 다 소진하기 힘들다. 다만, 장마당 상인들의 경우에는 원거리의 다른 장마당에 물건 가격이 얼마인지, 물건을 보냈으면 도착했는지, 그쪽에서 보냈으면 자신에게 언제쯤 도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한 달에 200분이 모자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북한주민들은 요금제의 음성통화 시간을 문자 기능(북한 손전화에서는 SMS으로 사진을 보내듯이 통화시간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어서 이를 실제 현금을 주고받으며 거래했다. 앞서 한 분기의 기본요금이 2,850북한원이며 총 3개월에 600분이 라고 언급한 것을 기억해보라. 이를 계산하면 분당 4.75 북한원 꼴이 된다. 장마당에서 1분당 5 북한원, 혹은 수수료를 붙여 7~10 북한원에 돈을 받고 문자 기능을 통해 음성통화시간을 거래한 것이다. 현금이 없는 장마당 손님이 음성통화시간을 장마당 상인에게 보내고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2023년 시점 한국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2010~2015년 시점 한국의 연구자에게 북한에서 이런 결제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금융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북한주민 스스로 '전화돈'이라는 결제방식을 만든 것이다.

이는 북한당국에게도 관심을 얻어 2015년 이후 정식 요금제에 음성통화시간 월 200분과 별도로 150원이라는 전화돈이 생성되었다.

이때부터는 음성통화시간이 문자기능을 통해 거래될 수 없고 '150원' 전화돈 계정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휴대전화번호가 곧 계좌번호처럼 상대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돈을 송금하겠다고 기능을 입력하면 즉시 송금이 되었다. 소위 '돈주'들을 통해 송금을 하려고 해도 수수료가 붙고 하루나 이틀 소요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화돈은 내가 직접 상대에게 송금을 할 수 있고 수수료가 붙지 않으므로 많은 북한주민들이 전화돈 사용을 선호하였다. 다만, 북한의 휴대전화가 당국으로부터 도청될 것을 염려하여 소액을 송금하였고, 1,000달러 이상의 큰 돈은 수수료가 불더라도 안전하게 상대에게 송금되도록 돈주를 활용하였다.

〈표 1〉를 보면 2000년~2019년 사이에서 2010년을 기점으로 나누어, 내화현금(북한 원화), 외화현금(미 달러, 중국 위안화), 곡물, 전화돈, 외화카드(달러나 위안화를 충전할 수 있는 전자결제카드, 나래, 고려 등), 내화카드(북한원화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전자결제카드, 전성 등)의 사용빈도를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조사한 것이다. 물론 북한의 부족한 금융인프라와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의 금융이해도로 인해 현금이 99% 이상 사용되는 것은 시기의 변화와 관계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것은 전화돈의 사용변화이다. 2009년까지는 전화돈이 아니라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 0%이지만 2010~2019년에는 10.7%의 사용빈도를 보이며, 다시 이를 2010~2014

〈표1〉 북한주민들의 지급수단별 사용 경험 비율(복수응답 허용)

사용시기	2000~2009	2010~2019	2010~2019 (단위 : %)			
			2010~2014 (A)	2015~2019 (B)	B-A	
실물 지급 수단	내화현금	100.0	99.7	100.0	99.4	-0.6
	외화현금	17.5	37.6	32.9	42.4	9.5
	(달러화)	11.9	23.7	18.8	28.7	9.9
	(위안화)	5.6	15.7	14.4	17.0	2.6
	곡물	20.7	14.7	18.0	11.4	-6.6
전자 지급 수단	전화돈	0.0	10.7	4.5	16.9	12.4
	외화카드	0.0	9.7	5.4	14.0	8.6
	내화카드	0.0	3.4	0.0	6.8	6.8

자료 : 이주영(한국은행, 2022)

년과 2015~2019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0~2014년 4.5%에서 2015~2019년 16.9%로 증가한다. 다른 비교대상군에 비해 사용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휴대전화 이용인구가 북한인구의 20~25%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화돈의 사용빈도가 다른 지급수단의 사용빈도보다 증가폭이 높다는 것은 ‘전화돈’의 사용편의성과 선호도가 북한주민들에게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전화돈 사용중단과 결제어플 <울림>의 등장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 가게라는 주체가 재화와 용역, 대부와 저축 등을 주고받으며 자본이 순환되는데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국가가 중앙은행을 통해 기업, 가게가 급여와 상품소비를 통해 화폐를 순환시킨

다.⁴ 화폐가 자본이 아니라 단지 물품을 교환하는 매개체에 한정되므로 자본의 가치보다는 물품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개인이 국가로부터 배치는 직장 노동에 제공하고 당국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은행 계좌에 식량 배급 등 소요 금액이 제외된 급여가 은행계좌로 입금되는데 이 때 급여에서 인출한 화폐가 일종의 쿠폰처럼 기업소에서 필요한 소비재 물건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될 뿐 자본의 투자목적으로 이용될 수는 없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고난의 행군’이 확산되면서 국가차원에서 배급해야 하는 식량도 끊기고, 재정이 부족하니 기업소나 공장에서는 생산을 계획대로 하지 못하거나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급여도 부족하였다. 주민들도 식량배급과 급여가 끊기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 여성

4 최지영 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KINU 연구총서 22-23), 서울 : 통일연구원, p.39

들이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아 벌어들인 화폐로 필요한 식량과 물품을 구입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장마당에서 힘들게 번 돈을 은행에 다시 입금한 후에 필요할 때 인출하려고 하면 은행에서는 현금부족으로 인출할 수 없다고 하니 북한주민들은 은행을 불신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이 돈을 벌면 은행에 저축을 하지 않고 집 벽장이나 장판 밑, 그 외 자신이 알만한 은밀한 곳에 숨겨놓고 쌓아두는데, 쌓아두기만 하고 은행으로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화폐침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순환되지 않고 침전되던 돈이 전화돈을 통해 조금이나마 순환되는 것을 북한당국이 목도한다. 공식 요금제에 전화돈을 편입시켜 북한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침전된 화폐가 전화돈 충전을 위해 북한주민들이 북한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은행과 체신소(전화국)에 돈을 입금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일정 정도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개인과 개인의 돈 거래가 휴대전화를 통해 거래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화폐침전을 개선하는데에는 한계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전화돈’ 사용을 2020년 7월경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⁵ 정확히 말하면 휴대전화 사용자 간의 송금기능을 막은 것이며, 단순히 자기 휴대전화에 전화돈을 충전한 다음 음성통화 시간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어 있어 전화 돈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송금’

5 (자유아시아방송) 2020년 10월 19일, “전화돈 전송 금지의 의미”

기능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전화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다.⁶

다만 북한당국은 <울림>이라는 결제어플을 북한 스마트폰 형태의 휴대전화에 보급한다 (<그림 1> 참조).⁷ 이 <울림>이라는 결제어플은 기존의 전자결제카드인 <전성>카드나 <나래>카드와 같은 결제카드를 연동시킬 수 있다. 돈을 직접 <울림>에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성>이나 <나래>카드 같은 전자결제 카드에 돈을 충전하는 것이며, 개인이 물건을 구매하고 구매처에 카드와 연동된 <울림>어플로 결제하면 카드에 충전된 범위 안에서 돈이 지급된다. <울림> 결제어플 최신 버전은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원하는 결제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림 2> 참조).

<전성>카드는 조선중앙은행, <나래>카드는 조선무역은행에서 발행하는데 이 카드에 충전하려면 은행이나 호텔 등 지정된 충전소에서 돈을 충전할 수 있으며, 이 돈은 결국 은행 계좌에 예치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킨다. 북한당국은 침전된 화폐를 자연스럽게 은행에 입금시키도록 유도하면서 화폐순환을 유도하고, 모야진 화폐를 국가의 건설사업이나 필요한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6 <DailyNK> 2020년 10월 19일, “‘최대 5000달러 손해’...전화돈 매매 금지에 돈주들 패닉” ; <DailyNK> 2020년 10월 21일, “전화돈 매매 금지, 주민에도 ‘불통’... ‘충전카드 무용지물’”

7 <NK경제> 2018년 11월 9일, “북한 모바일 결제 플랫폼 울림 살펴보니

〈그림 1〉 결제어플 <울림>



자료 : <NK경제>

〈그림 2〉 북한의 QR코드 결제



자료 : <조선중앙TV>

5. 나오며

최근 한 북한전문언론매체에서는 어느 북한 주민과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북한주민들이 이러한 모바일 결제 사용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평양에서는 열 명 중 여섯 명, 지방에서는 열 명 중 네 명정도가 이러한 모바일 결제를 사용한다고 한다.⁸ 전수조사를 한 데이터가 아니고 단순히 어느 북한주민의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를 데이터로 신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북한에서도 <울림>을 비롯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결제가 주민들로부터 이용되고 있으며 선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제방식이 변화된다는 것은 북한금융, 나아가서 경제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류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물물교환을 하다가 화폐를 사용하여 결제를 했다.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고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지

자 물류와 유통에도 혁신이 일어났다. 이제 모바일 결제 확산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휴대전화와 카드만 있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이러한 변화를 활용할 것인지 차단하고 단순히 화폐를 흡수하는 수단으로 사용할지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는 후자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전까지 장마당에서 벌었던 화폐를 숨겨놓았던 화폐는 돈이 어디서 어디로 유통되는지 북한당국이 알 길이 없었는데 휴대전화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송금이나 결제는 북한주민들의 화폐사용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어 오히려 북한당국의 관련 정보가 축적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라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에게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소비자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까? 북한에서 PC나 휴대 전화에서 접속 가능한 전자상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국영 기업소나 무역회사가 운영하는 전자상점만이 전자결제를 통해 매출을 늘리는 것은 북

한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하지 않고 국영상점에서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단순히 결제기능만 제공하지 않고 은행과 연계되거나 자체 금융기능을 탑재하여 예금이나 적금, 대출 같은 금융상품을 제공하는데 반해 아직 북한의 <울림>은 이러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송금과 결제기능을 제공하여 최근 성장하고 있는 북한 전자상점으로부터 PC나 모바일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보인다. 침전된 화폐순환을 위해 소비자의 결제기능만 제공할 뿐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이나 선진국의 모바일 결제는 ‘비대면 결제’가 갖는 편의성과 이를 통한 산업 및 유통부문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 추구하는 현 시점의 ‘모바일 결제’는 ‘비대면 결제’가 갖는 편의성은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침전된 화폐를 국가 단위로 흡수하고자 하는 목적성과 화폐유통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바일결제 성장과 함께 최근 북한 금융부문에 눈에 띄는 변화로 상업은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⁹ 개인고객에게는 높은 금리로 저축을 유치하고, 기업고객에는 대부상품을 홍보하며 적절한 금리로 대출을 유치하려 한

다.¹⁰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상업금융 기능이 모바일 결제와 연동될 것이다.

북한의 모바일 결제 인프라 구축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현대적인 결제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모바일 결제의 기능을 악용해 당국의 화폐유통 통제기능만을 강화해서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어렵다. 또한, 전자상점과 모바일 결제 확대가 장마당의 순기능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화폐를 흡수하는데에만 주목적인 기능을 갖는다면 아무리 현대적인 결제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모바일 결제 사용을 주의할 것이다. 화폐를 순환시키려면 단순히 결제기능만 현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 소비자에게도 화폐가 자본이 되어 가치가 순증하고 투자를 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북한당국이 모바일 결제를 단순히 국가재정 확충이라는 방향에서 그치지 말고 북한주민의 삶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결제의 현대화에서 삶의 현대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 🐼

8 <DailyNK> 2023년 8월 1일, “은 오프라인서 전자결제 이용하는 北 주민 점점 늘어나”

9 김민관·김수현, “북한 지방 상업은행 운영 현황과 전망,” 「북한포커스」 (서울 : KDB미래전략연구소 개 발금융연구센터), 2023.8.14

10 <DailyNK> 2019년 4월 30일, “북한, 유희자금 확보 주력?... “상업은행 10% 고금리 홍보””

북한의 재정·금융체계와 사금융

정은찬 (국립 통일교육원 교수)

I. 머리말

북한의 재정·금융체계는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에 맞게 구축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4대 경제난(식량난·에너지난·원자재난·외화난)은 북한 재정·금융체계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변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시행한 2002년 7.1조치(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2009년 화폐개혁, 2012년 6.28방침(우리식 경제관리방법), 2014년 5.30담화(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2016년 상업은행 설립 등의 경제정책들은 재정·금융체계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기업소법을 제정(2010)하여 공장·기업소의 자율적 운영에서 개인유휴자금을 활용하도록 한 조치, 대부법(2023) 제정을 통해 재정 부문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시행하려는 시도 등은 재정·금융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북한의 정책적 변화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재정·금융체계와 사

금융 실태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재정체계

1. 재정에 대한 북한식 정의

재정의 개념에 대해 북한은 “국가 및 기관, 기업소들이 화폐자금을 형성, 분배, 이용하는데서 나타나는 경제관계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 재정은 국가기관과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를 갖는 모든 경제조직체의 생산 및 분배, 상호 거래 내용 등을 포괄한다. 자본주의 재정이 민간기업, 은행, 보험회사가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국가재정은 이를 보충하는 데 불과한 것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사회주의 재정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예산이며, 국영기업 및 협동조합 재정, 은행과 저축기관, 국가보험 및 대외금융을 포함한다. 북한은 국가예산에 대해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재정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정자원의 기본부문이 국가예산을 통하여 동원, 이용



〈북한 조선중앙은행〉

되는 구조이며, 재정계획에서 화폐자금의 형성과 분배, 이용의 방향을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재정계획’은 ‘국가예산’과 동일한 개념(재정계획의 가장 핵심 요소)으로 재정의 각 부문별 자금수요, 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출(화폐흐름) 상황을 총괄하는 계획이다. 재정계획은 국가종합재정계획과 기본재정계획, 인민경제부문 및 기관·기업소의 재정계획으로 구분된다. ‘국가종합재정계획’은 전반적 경제의 재정자원과 그 흐름을 반영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기본재정계획’(국가예산)은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화폐자금의 구성과 그 지출내용을 반영한다. 따라서 국가종합재정계획(인민경제 종합재정계획)은 기업소, 기관, 협동단체 등 전체적인 화폐흐름을 포괄하고 각 기관별 화폐흐름과 이외 전체 재정수입을 형태별로 분류하여 재정지출을 목적별로 구분한 다음 다시 축적과 소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계정’과 유사한 개념이다. 재정계획의 작성은 국가계획위원회의 ‘국가경제계획’ 작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1년 단위로 작성하고 전년도 6월부터 시작하여 연말에 종결한다.

2. 재정규모

북한 사회주의 경제에서 재정은 (1)계획경제 운영에 대한 자원배분 기능, (2)통제기능, (3)소득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의 재정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본주의 국가보다 높는데, 이는 국가가 국영기업소의 자본형성 및 투자 외에 운영자금까지 부담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적 소비까지 모두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재정은 시장경제에서 재정이 (1)국방·외교·치안유지·각종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 공공재의 공급, (2)정부에 조세, 직접세의 부과,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 분담, (3)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는 비교된다. 북한 사회주의는 국내의 유효수요변동에 따른 경기순환 문제가 없으므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은 불필요하며, 소득재분배 기능도 가격과 임금이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정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재정 부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1996~2001년의 경우 90%의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의 재정규모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1994년까지는 191.7억 달러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경제위기 이후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4년부터 약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재정 규모가 축소한 이유에는 계획경제기능이 전반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일부 부문에서 작동하더라도 왜곡되거나 변형된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과 연관되

어 있다. 2018년 북한의 재정규모는 약 83.1억 달러로서 1990년대 가장 높았던 1994년 191.7억 달러의 43%에 해당한다. 2019년은 84.9억 달러로서 2018년 대비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4년 191.7억 달러와 비교할 때 낮은 규모이다. 또한, 2020년 87.3억 달러, 2021년 88.1억 달러, 2022년 89.1억 달러, 2023년 90.6억 달러와 비교해도 현재 북한의 재정규모는 1994년과 비교할 때 낮은 규모이다.

3. 재정예산 수입 및 지출

북한 경제에서 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국가예산이다. 따라서 북한의 재정예산수입은 곧 국가예산수입이며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이다.

북한의 국가예산수입항목에는 (1)사회순소득, (2)개인소득, (3)재산순환과정상 화폐자원이 포함된다. 이중 사회순소득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소득은 사회보험료수입금, 봉사료수입금, 부동산사용료수입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화폐자원에는 고정재산감가상각금, 국가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경제무역지대수입금, 기타 수입으로서 관세 및 벌금, 물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항목 중 국가예산수입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은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 등이다. 거래수입금은 일정한 비율로 가격에 고정되어 생산물 실현에 따

라 국가예산으로 쓰이는 사회순소득의 한 부분으로 우리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이다. 또한 국가기업이익금은 국영 공장기업소들이 경영활동의 결과에 창출한 기업소 이윤 가운데서 그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부분으로 우리의 법인세와 유사한 개념이다. 사회보험료 수입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근로자 임금의 1%를 선공제하고, 기관 및 기업소와 협동단체에서의 총지급 임금의 7%를 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사용료수입은 국가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대가로 2007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농업토지사용료와 각 부지 및 건물, 어장사용료, 자원비 등의 형식으로 수입하는 재정예산수입이다.

북한은 이러한 항목 위주로 재정예산수입을 집행한 이후 이를 여러 분야로 나누어 지출하고 있다. 북한의 국가예산지출항목은 (1)인민경제비, (2)사회문화시책비, (3)국가관리비, (4)국방비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경제비는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국가예산으로 공업, 농업, 수산, 과학기술, 산림, 기본건설 등의 부분에 대한 화폐자금 지출을 포함한다. 또한 사회문화시책비는 사회문화적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지출되는 국가예산으로 의료·보건 분야의 인민적 시책비, 체육·과학·문화사업 분야의 사회문화사업비로 지출된다. 국가관리비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사업비, 행정기관 유지비 등 국가관리기구 유지 및 운영을 포함하며, 국방비 지출로는 군 병력 및 부대 유지를 위한 지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국방비 지출과 관련하여 매

해 평균 전체 국가예산 중 15.9%가 지출된다고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방부문에 지출되는 예산 규모를 3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III. 북한의 금융체계와 사금융

1. 금융에 대한 정의와 금융체계

북한은 금융을 “국가은행(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유통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즉, 북한은 금융을 국가 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활용되는 재정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 북한 금융의 포괄범위는 국가적 차원의 중앙은행을 통해 유통되는 자금만을 포함하며, 기관·기업소 간 또는 기관·기업소와 개인 간의 직접적 자금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북한 금융제도의 변천은 1946년 협동 신용기관인 농민은행 설립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46년 북조선 중앙은행 설립, 1950년 건설자금은행 설립, 1958년 농업협동화 완성 이후 농민은행을 농업은행으로 개편하는 과정, 1959년 북조선 중앙은행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으로 개편하였으며, 1959년 농업은행을 중앙은행에 편입시켜 통합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1964년에는 건설자금은행을 중앙은행에 편입시켜 통합시키고, 1964년 산업은행을 신설하였으며, 1976년 산업은행을 중앙은행에 통합하고, 2010년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한 이후 2016년 상업은행 설립 등

의 변천 과정을 거쳤다.

현재 북한의 금융체계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으로 분류되어 있다. 국내금융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북한원화 유통에 집중하고 있으며, (1)자금공급, (2)화폐유통, (3)신용의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자금공급은 기본건설자금공급, 대보수자금공급, 인민경제사업비공급, 사회문화시책비공급을, 화폐유통은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을, 신용은 저금, 대부, 보험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국제금융은 다른 국가와의 외화유통에 집중하여 (1)외국환거래, (2)국제신용 및 결제, (3)국제보험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북한의 금융은 (1)자원배분적 기능, (2)재정통제적 기능, (3)외화거래합리적 조직기능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계획 수행에 필요한 화폐자금의 조성 및 분배, 기업의 재정계획 수행 현황 감독(원에 의한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의 금융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사회주의 금융체계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다. 경제난 시기 붕괴된 자금공급체계를 복원하지 못하여 공장기업소에 대한 재정보조, 국정가격 책정을 통한 주민 대상 추가 혜택 등을 원만히 시행하지 못하고 자율성과 자력갱생에 맡기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1)국가재정자금보장 범위를 축소하여 기업 경영활동자금인 유동자금공급을 축소하고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공급은 중요 대상에만 지급하고 축소하고 있으며, (2)자력갱생에 의한 자금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재정보조금 축소에 자체 자금 조성과 은행대부를 방안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3)개인 사금융 활용(유휴화폐자금)을 통한 공장기업소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도 묵인하고 있다.

2. 국내금융 현황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개인 수중에 집중된 자금이 기관·기업소에 직접 투자되는 불법대부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상업은행을 설립(2016)하고 은행의 돈자리 계좌를 신설, 현금과 외화돈자리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은행대부는 (1)계획대부(계획자금)와 (2)조절대부(추가계획자금), (3)보충대부(계획미달 추가자금)의 3가지 유형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은행대부 자원 조성 항목은 저금·보험료·국영기업소의 예금·협동농장의 유휴자금·은행자체자금·개인송금자금·예산계좌자금 등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저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이 강제 저금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실효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저금 종류에는 (1)준비저금, (2)보통저금, (3)저금권저금, (4)추첨제저금이 있다. 이중 준비저금은 일정액을 3개월 이상 예금하고 만기 시에 인출하는 장기성 예금(우리의 정기예금과 유사)이며, 보통저금은 저금 금액과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성 저금(우리의 보통예금과 유사)이다. 저금권저금은 저금액에 해당하는 저금증서를 통장 대신 발급하는 단기성 저금으로 저금권 발급은행 이외의 은행에서도 인출이 가능

하다(우리의 CD와 유사). 마지막으로 추첨제저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저금과 유사하나 별도 이자지급 없이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는 추첨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시기별로 의무화하여 강제 저금시키는 항목이다. 북한의 저금 연이율은 준비저금의 경우 3.6%, 보통저금 3%, 저금권저금 3%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저금제도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개인 수중에 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에 저금을 하지 않고 있다. 은행대부 자원 마련에서 핵심을 이루는 저금에 북한 주민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된 이유는 현금출처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저금 인출의 기한 연장, 은행에 대한 신뢰 붕괴 등 때문이다. 이러한 은행저금 회피 현상은 북한의 은행대부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대부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은행대부자금 조성의 한계가 뚜렷하고, 대부자금 상환능력 심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미상환기업이 증가하여 자금 유통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타 예산잔고, 공장기업소 및 협동농장의 예금잔고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은행대부 이자 평균은 약 3.5~4.0% 정도, 상업은행 설립 이후 이자율은 1년 정기 5%, 2년 정기 6%, 3년 정기 6.5%, 5년 정기 7.5%로 추정되었다(중국 연변대 최문 교수의 증언, 2016). 그러나 최근 입국한 탈북민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공장기업소는 상업은행보다 개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평양 순안공향에 위치한 CD기>

북한의 화폐유통은 신용과 자금공급에 기초하여 화폐자금이 이동함을 의미한다. 화폐유통은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으로 구분되며, 현금유통은 기관·기업소와 개인 간, 개인 상호간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형태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무현금유통은 기관·기업소 간 현금의 직접적 이동 없이 수표와 같은 문서에 의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제거래를 말한다. 이로부터 화폐유통은 기관·기업소의 경제거래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금을 은행으로 집중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무현금유통은 기관·기업소간 생산수단, 대보수 및 중소보수 자금 결제를 대체한다. 현재 북한 현실에서는 사실상 무현금거래는 대폭 축소되었고, 정책적 조치에 의해 점차 폐지 및 축소되는 추세이다. 이는 무현금유통의 자금원천이 국가재정보조금, 은행대부자금, 기관·기업소의 예금이지만 이를 보장할 재정력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북한 금융의 이러한 현실은 당국 차원의 화폐유통의 한계, 이를 극복할 대안 미제시의 한계로 사금융 확산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비합법적 자본시장

형성을 촉진 시키고 있다.

3. 사금융 실태

북한의 사금융은 1980년대 환전상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개인 상인의 도소매 활성화를 통해 더욱 진화하였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소극적 지역 범위에 있던 북한의 사금융은 현재 전국적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확대되는 추세다.

북한의 사금융은 개인 수중에 자금을 집중하던 돈주의 등장에서 시작하여 고리대금업을 통한 자금 축적, 송금 및 물류대금 결제를 대체하는 개인은행(돈장사) 등장 등으로 거듭났다. 이 과정에 공장기업소 대부 자금을 전담하는 신흥부자, 권력형 돈주도 등장하였다.

현재 북한의 사금융은 (1)송금, (2)물류대금 결제, (3)공장기업소 자금대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송금 기능은 화폐의 직접적 이동 없이 송금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불제로 신속하게 개인의 송금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전국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물류대금 결제시스템도 일명 ‘물주’로 불리는 개인상인 간 거래에 의해 화폐유통 없이 장부 간 거래로 물자대금이 결제되는데, 그 방식이 총 누적 금액을 환산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추가 금액만을 한 번에 결제하는 청산결제 방식이다. 공장기업소의 자율적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주는 경우에도 공식적으로는 상업은행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직거래로 개인과 기업소간 결제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북한의 사금융 시장을 촉진 시키는 요인은 공식 금융체계의 기능 부재, 자본시장을 공식화 하지 않은 시장운영의 구조적 한계, 정치체제 유지를 우선으로 한 경제정책 시행의 한계, 개인의 부 축적을 위한 욕망과 권력층의 이해관계 결탁 등이다. 북한의 금융 현실은 부를 축적한 소수의 계층에게는 권력층과 유착하여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주민에게는 열악한 삶을 지속하게 하는 굴레가 되고 있다.

IV. 맺음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상업은행 설립, 전자상업봉사체계(온라인쇼핑몰) 구축, 저금 활성화를 통한 자금순환 촉진, 카드 및 전자화폐의 활용을 장려하는 등 여러 정책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상업은행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맞추면서 현금거래사업을 조직하여 자금유통과 기관·기업소들에 대한 재정적 통제, 자체로 채산을 맞추는 ‘금융기관채산제’를 실시하려고 꾀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자결제카드의 활용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시행하여 컴퓨터와 핸드폰(‘손전화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온라인쇼핑몰(옥류, 만물상, 은파산, 내나라, 앞날, 실리, 복리 등의 전자상점)과 전자결제를 적극 활용할 데 대하여 독려하고 있으나 지역적, 계층별 생활수준에 따른 이용 제약 등으로

실효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재정·금융체계가 직면한 문제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동반한 경제정책 시행이 선행되어야 해결가능하다. 정치체제 유지보다 주민들의 삶을 우선하는 경제정책 시행에 그 답이 있다. 

이끄심

12화 - 본향

김서윤 전도사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내가 살던 나라에도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곳곳에 경찰들이 지키고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검문했고 반경 5km이내로는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격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길어도 몇 달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 걱정하지 않았다. 경찰들의 눈을 피해 걸어서 친구네 집으로 놀러가기도 하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예상보다 봉쇄가 길어지고 거리의 분위기도 점점 더 흉흉해져갔다. 봉쇄가 길어지고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자 현지인들은 이를 중국인들에 대한 분노로 표출했고, 나중에는 무차별적으로 아시아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하니 ‘정말 이러다가 가족들 얼굴 한번 다시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움과 그리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은 전면적인 봉쇄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 방역도 비교적 잘 된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니 더욱 귀국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봉쇄로 인해 한 동안 출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잠시 동안 출국만 가능하도록 허

용이 되었다. 그 때 그 나라에 살던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한국으로 돌아갔다. 편도 항공권 가격이 평소의 두 배가 넘었지만 그 돈을 지불하고도 표를 구할 수 없었다. 너도나도 한국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나는 그래도 여행사에서 일했던 시절의 인맥을 사용해서 어렵사리 항공권을 구할 수 있었다. 비행기에서는 마스크를 세 겹씩 겹쳐 쓰고 비즈니스석 비용을 주고 이코노미에 앉아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내가 2주간 격리할 공간을 위해 동생은 어머니 집으로 이동했고, 내가 동생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한국에 왔지만 어머니와 동생과 부둥켜안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서 얼굴만 보고 반갑다고 인사해야 하는 상황이 못내 아쉬웠다.

격리하는 동안에는 가족과 영상통화로 그리움을 달랬다. 한국에 와서도 영상통화라니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영상통화 중에 “서윤아, 네 동생 많이 아프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보니 격리 때문에 멀리서 인사하던 동생의 눈에 초점이 흐렸던 것 같았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이겠거니 했었는데 알고 보니 동생은 심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 어쩌다가 그 씩씩하던 아이가 공황장애

를 겪게 되었을까?

내가 해외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어머니와 동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잘 쓰지 않으시고 양말에 구멍이 나면 기워서 다시 신으실 정도로 절약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였다. 그렇게 아끼고 벌어서 모아둔 돈이 상당했다는 걸 알기에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필요없는 일이었다. 동생도 규모 있는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었기에 나는 나만 걱정하고 챙기면 되었다. 그런데 내가 한국에 들어왔을 무렵에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다. 우리 가족은 투자사기를 당해서 그 동안 모아온 모든 돈을 잃고야 만 것이었다. 함께 투자했던 동생은 너무나 좌절된 나머지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돈을 아끼시고 모으시던 분이 왜 투자를 하려고 하셨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동생의 상태는 심각했다. 몇 번이고 자살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정신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옷을 여러 겹 껴입어도 추워했고 불면증에 시달릴 뿐 아니라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나는 너무 걱정이 되어 격리가 끝나자마자 동생을 돌보기 시작했다.

가족이 함께 지내게 되었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다. 동생의 건강도 건강이었지만 사기를 당한 집이 의례히 그렇듯 어머니도 마음의 병이 깊었다. 특하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싸우기가 일쑤였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야 할 집이 지옥이 되고야 말았다. 집에 있으면 너무 진이 빠지고 괴로워서 밖에서 볼일을 보고 귀가할 때에도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마침 그 때가 장마철이었는데 비를 맞으며 집 밖에 서서 많이 울었다. 나중에는 도

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아는 언니들의 집을 전전하기도 했다. 결국 나중에는 집에서 독립해서 살 수 밖에 없었다.

우울한 나날들 속에서 내 마음속은 번민으로 들끓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나는 왜 북한에서 태어났는지, 왜 한국에까지 왔는지 등등 온갖 질문들이 마음에서 올라왔다. 죽고 싶는데 이렇게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았다.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온 것일까? 정말 사후세계는 있는 것일까?’ 내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찼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 답을 풀어낼 수 없었다.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무렵, 숙명여자 대학교 학부시절부터 나의 지도교수님이셨던 소은희 교수님께서 내게 연락을 주셨다. 학업에서도, 신앙에서도 항상 나에게 조언해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고마운 분이였다. 해외에서도 종종 연락드렸고, 평소 같았으면 귀국 후 먼저 찾아뵈었을 텐데 고단한 삶에 경황이 없어 연락을 드리지 못했더니 교수님이 먼저 연락을 주신 것이었다. “서윤아, 너 한국에 와서 뭐하고 있니?” 교수님의 질문에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대답 “교수님, 저 죽고 싶어요.” 라는 대답이 튀어나왔다. 갑자기 왜 그러느냐고 물으시는 교수님께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고 싶다는 소리만 했다. 내 상태를 확인하신 교수님은 내일 자신의 집으로 꼭 오라고 하셨다.

다음날 교수님 집에 찾아가서 차를 마셨다. 교수님께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며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다. 나는 교수님 앞에서 평평 울며 많은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나

는 누구입니까 교수님? 왜 태어났고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까. 잘 사는 듯 보였는데 지금에 와보니 어머니는 이렇고 동생은 이렇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죽고 싶는데 진짜 천국이 있는 건가요?” 교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무례하게 들릴 수 있었겠지만, 나는 정말 절실하고 간절했다. “교수님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시는데 교수님이라서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죽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천국에는 못 가겠죠...” 다 토해놓고 나니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서윤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나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교수님,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저만큼 가난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또 지옥과 같은 헬조선에서 살고 있는데 천국이 어떻게 제 것이 됩니까?” 그때 나는 그동안 쌓인 불만을 믿고 있던 교수님께 대들 듯이 쏘아붙였다.

그 동안의 정체성의 혼란과 고단한 인생의 이유에 대해 평평 울며 쏟아놓는 내 모습을 보고 교수님은 함께 우셨다. “교수님은 제가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서윤아, 너는 모르겠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야. 그러니 이 땅에서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네?!” 이 무슨 황당한 소리란 말인가? 하지만 처음 듣는 그 말에 내 머리는 망치로 맞은 듯 번쩍했고 내가 모르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서윤이가 대학교에서 앰버서더로 활동을 했잖니. 네가 속대

를 대표하는 앰버서더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도 특파원으로 파견하신 거야. 그러니 너는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도, 미국 사람도 아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을 바라 봐야지, 이 한 쪽 아래서 저 멀리까지 내다보려고 하니 볼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란다. 하나님은 너를 그렇지 만들지 않으셨는데, 너는 계속 네 힘으로 해 보겠다고 하니 많이 고단했을 것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수님의 입을 통해 나에게 전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눈물콧물을 쏟으며 흐느껴 울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과 말들이 일견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사망의 길을 걷고 있던 나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세계의 말씀들이었다.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교수님께 다시 여쭙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니 성경을 봐야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사실 그 전에도 성경공부를 하자고 교수님께서 여러 번 권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피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핑계거리를 대며 피할 수도 없었고 죽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온라인으로 매일 밤 1:1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말 성경책이 너무 어려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교수님께서 중국어 성경과 우리말을 함

께 공부하자고 하셨다. 그렇게 교수님께서 몇 년 전에 선물로 주셨던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니 그동안 몰랐던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달아졌다. 과거에는 성경말씀 한 장을 읽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살아서 나와 함께 숨 쉬는 것만 같았다. 밤낮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 일이 너무나 행복했다. 이동할 때도 오디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다녔고, 잘 때도 말씀을 듣다가 결국 날밤을 셀 정도로 말씀이 무엇보다도 달콤했다.

성경공부를 통해 삶의 새로운 세계와 비전을 보게 된 나는 동생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교수님하고 성경공부 하면서 여동생을 다시 예전처럼 살리고 싶어 기도했고 예수님께 동생을 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동생은 예전부터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뭐 하러 교회 다니며 비판을 했었다. 그러니 성경공부를 하자고 동생에게 선뜻 권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했던 소원이 이루어져 동

생이 용기를 내어 우리 집에 와서 내 옆에서 자연스럽게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생은 하나님을 만난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었던 동생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점차 치료가 되는 놀라운 과정을 겪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다시 살았더니,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내 힘으로 이루어 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동생 뿐 아니라 어머니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제 3자가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나는 고백한다. 낙심하고 괴로워서 자책하며 울 때도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보잘 것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음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이제 나의 꿈은 180도 바뀌었다. 그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성을 얻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졌다.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졌다.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고 싶어졌다. 그리고 이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는 것을 깨달았다. 더 나아가 이 진리와 복음을 모르는 과거의 나와 같은 북한 사람들이 생각났다. 전에는 그들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할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 안타까웠고 울면서 기도하게 하셨다. 꼭 나처럼 헤매고 있는 그들의 심령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엠버서더가 되리라 다짐했다. 이런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던 어느 날 교수님은 나에게 신학을 공부해보기를 권유하셨다. 제대로 배워야 통일이 되면 북한의 아이들에게, 또 고향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권면해주셨다.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 나에게 일어난 변화중 하나는 과거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결정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이제는 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원에서의 3년이란 기간 동안 순조롭게 술술 풀린 일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다. 이 길이 안락하고 쉬운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대학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부조리하고 부당한 가운데서도 너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계신다. 세상은 나의 주변을 흔들고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속삭인다. 하지만 나의 우직한 결단이 나를 살게 함을 다시금 고백한다. 그 결단은 바로 “사람을 위해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사

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다.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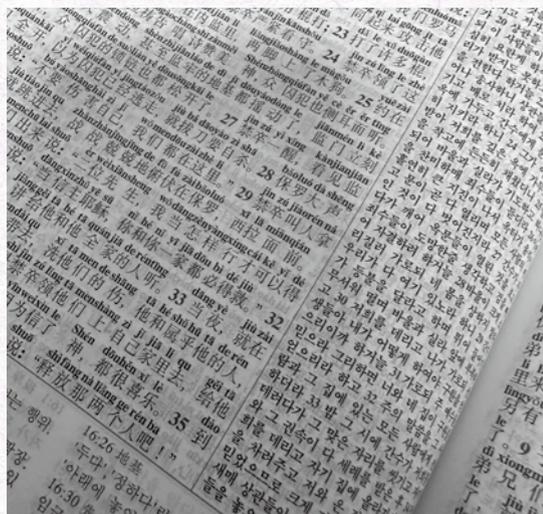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이다.”

“나는 왜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다.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숙제를 끝내면 하나님 계시는 본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근본 지혜와 지식을 배우게 된 것은 더 없는 기쁨이며 작은 실천임을 고백한다. 살겠다고 몸부림쳤지만 죽어 있었고, 밑동이 잘려버린 나무처럼 죽었던 삶이 다시 뿌리를 이어내려 갈 수 있게 해주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다. 이제 본향, 나의 고향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날까지 이곳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

지금까지 김서윤 전도사님의 탈북민 수기 “이교심”을 애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자가 성경공부에 사용했던 중국어 성경>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9.19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북한이 11월 21일 오후 10시 43분 군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만리경-1호' 군사정찰위성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 또한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수 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사 성공 배경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우주발사체 실험에 나섰지만 모두 2단

추진체에 문제가 생겨 실패했었다. 군 당국은 실제 러시아의 기술 자문 등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 정부는 11월 22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에 돌입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번 효력 정지에 따라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하루 뒤 북한도 사실상의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하였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한 남측을 비난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연합뉴스, 11월 22, 23일 외 언론 보도 종합)

탈북민 '대북 송금' 곳곳서 이례적 경찰 수사 논란

경찰이 탈북민을 상대로 대북 소액 송금에 대한 수사에 잇따라 착수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복수의 탈북민과 탈북민단체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탈북민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 경찰의 동시다발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탈북민 대북 송금은 브로커를 통한 속칭 '환치기' 방식의 자금 반출이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정부는 그간 탈북민의 가족 대상 송금을 인도적 차원에서 묵인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만성적 식량난을 겪으며 생계 어려움에 시달리는 재북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고, 일인당 액수도 크지 않아 역대 정부가 단속하거나 차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 사회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유엔 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 강제복송금지 촉구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올해 결의안에는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복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이 추가됐다. 탈북민 강제 복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

라는 촉구도 포함됐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협이 있을 경우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안과 함께 국군포로와 납치·역류자 문제도 추가됐다. 지난해에 이어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참고: 연합뉴스, 11월 16일)

통일부, 김정욱 선교사 등 北역류자 가족 납북피해자로 인정

통일부는 북한에 10년간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역류자의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월 2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날 결정했다.

현재 북한에 장기 억류된 것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이며, 이 중 4명은 국내에 가족이 있다. 북한은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길게는 10년 넘게 억류하면서 생사 확인 같은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의 가족이 납북 피해자로 인정돼 위로금을 지급받게 됐다. (참고: 연합뉴스, 11월 2일)

다만 이번 수사는 단순히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닌, 용공 혐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던 대북 송금 브로커 A씨 부부는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죄명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돼 있었지만, 그 내용에는 (송금에 참여한) 북한 내 공범이 수수료 일부를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용공 혐의가 적시됐다."고 언급했다.

관련하여 일부 탈북민 단체는 경찰이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만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증명하기 위해 무리하게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당국이나 기관원들이 탈북민 송금을 새로운 '돈줄'로 보고 브로커와 공모해 송금을 압박하는 정황에 따른 수사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 연합뉴스, 11월 15일)

1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3번째 시도 만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고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였고, 북한 역시 9.19 합의의 사실상의 파기를 선언하였습니다. 군사적 긴장과 국제적 대결구도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가운데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의사결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냉전의 대결구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2 북한 선교를 위한 세계 교회와의 협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인 선교사들의 체류와 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북한 선교의 사명을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현지 교회들도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나 중국, 그 외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현지인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이러한 교회들의 규모나 역량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 박해를 이겨내고 생존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지에 파견된 북한 사람과의 접촉도 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이들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를 북한 선교로 동원하고 언어나 문화이해 등의 측면에서 돕는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적 협력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해외 북한선교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경지역에서는 내년부터 관광이나 인적 왕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대유행과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이나 북러관계 밀착으로 인한 러시아 내 탈북자에 대한 처우 악화 등으로 선교 현장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성령 충만하고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역이 안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자력갱생과 버티기 기조 속에서 국내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활용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엘리트와 그에 연계된 계층들은 부유하게 하는 반면 서민경제는 더욱 위축시켜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한이 자신의 체제 모순을 인정하고 진정한 이민위천의 정책을 펼치도록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증진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소외 계층 북한 서민들의 겨울나기 준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겨울 추위는 남한에 비해 심하며 특히 북부 산악지역 등 소외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혹독합니다. 북한은 90년대 이후 필요한 양의 에너지를 주민들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 사용 등 자구책을 강구하며 에너지난

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에너지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북한 서민들이 겨울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겨울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돕기 위한 오픈도어선교회를 비롯한 선교단체와 기독 NGO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4월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지하교회 적발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러 건의 지하교회 적발 및 기독교 박해 사건이 보고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은 연일 사상 통제와 종교 박해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갇혀있는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 강제 복송의 위기에 처한 제 3국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0월 9일 중국에 수감중이던 600여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복송 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복송된 이들이 당할 강도 높은 심문과 처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큼니다. 유엔 제3위원회는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특별히 강제복송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강제 복송을 당한 이들 중에는 중국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독교 신앙 및 선교사 접촉 여부 등이 발각될 경우 정치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우리의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8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생명의 강 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여전히 인적 왕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국경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방송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는
선교를 위한 자료 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2023년 여름호를 시작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